

Vol. 38

주간

# 농업농촌식품동향

2019. 9. 23.

## ■ 정책동향

-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및 사회서비스 선진화로 포용사회 정착
-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2019년 사·도경제협의회 개최
- 전국 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 개최
- 대국민 재도전 권장 캠페인 2019 실패박람회 개최
- 농어업인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시행
- 차(茶)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 아침간편식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제12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 개최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주요 동향 등

## ■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1 | 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 이슈 브리프 2 | 일본 인구감소지역 대책 입법 동향
- 이슈 브리프 3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와 공공리더십
-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중장기 미국 농업전망에 미친 영향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EU, 농산물의 가격 투명성 강화 조치 도입 결정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촌 지역 인구와 마을 미래예측(2045년 농촌구조)
- 언론 동향 | 공익형 직불제 주요 동향

## ■ 통계·조사

-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 정책동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9.18.)

### □ 개요

- [관계부처 합동,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발표, 2019.9.18.] 범부처 ‘인구정책 TF’ 는 그간의 논의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을 경제활력대책회의(2019.9.18.)에 상정·발표

※ 정부는 지난 2019년 3월 28일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통계청)를 계기로 인구구조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기존의 출산율 제고 정책 지속 추진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정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인구정책 TF를 구성(2019.4.)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복지, 교육, 산업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음.

### □ 총론: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 [인구구조 변화 추이] 그간의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

- (저출산)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 미만\*(0.98)인 유일한 국가로, 출생아 수도 30만 명(32.7만 명)이 위협받는 수준(2018년 기준)이며, 지난 30년간 출산율 감소 속도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름\*\*.

※ 합계출산율(2017): 한국 0.98(2018), 미국 1.77, 일본 1.43, OECD 평균 1.65

※ ※ 1987~2017년간 OECD 회원국 출산율 감소 폭(명): 한국(△0.48), 일본(△0.26), 미국(△0.1), 영국(△0.07), 스웨덴(△0.06), 프랑스(0.06), 독일(0.14)

- (고령화) 낮은 출산율,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급속한 고령화 진행 중,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 2000년), 고령사회(14% 이상, 2018년)를 지나,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20% 이상, 2025년 20.3%)

- 예상보다 심화된 저출산 추이를 반영하여, 통계청은 2019.3월 “장래인구특별추계\*” 를 실시하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총인구감소시점은 이전 전망(2016년 추계치)보다 3년(2031년 → 2028년) 앞당겨지고, 생산연령인구도 2018년을 정점으로 더욱 빠르게 감소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하나,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2016년 추계치와 실적치간 오차가 크게 발생 → 현실을 반영하여 3년 만에 특별추계 실시

## ㉔ 정책동향

- [인구구조변화 영향]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절대인구 감소\***, **고령인구 급증 및 복지지출 증가**를 유발하며,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
  - ※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감소, 지방인구 감소 등
  - ※ ※ 생산연령인구 감소 노동공급 감소, 생산성 저하 → 성장잠재력 약화  
절대인구 감소 교육 인프라 과잉, 군인력 부족, 지역 공동화 현상 초래  
고령인구 급증: 소득공백에 따른 노후빈곤 문제,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회  
복지지출 증가: 재정압박, 재정수지 악화
- 이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기존 출산율 제고정책(‘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범부처 차원에서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정책**을 적극 추진
- [인구정책 TF 구성·운영] 2019.4.5.일 출범한 「인구정책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산하에 주관부처와 관계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10개 분야별 작업반**으로 구성
  - 그간 **TF 본회의**(기재부 1차관 주재) **6차례**, 고용·국방·교육반 등 **분야별 작업반 회의**(주관부처 1급 주재)를 40여 차례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직접 관련되는 **핵심적·구조적 과제 선별·구체화**를 위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
- [대응 필요성]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인구구조변화는 **국가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존망(存亡)과도 직결**되는 엄중한 문제로 정책적 대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여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종합적·근본적 대응방안 마련**이 **긴요**한 시점
-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금번 발표에 이어 **나머지 분야 정책과제\***도 추후 **경제활력 대책회의**(9월 하순~10월)에 **상정·발표**하고, 확정된 과제는 시급성·중요성·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나누어 **추진 시기**를 **조정**할 예정
  - ※ ① 생산연령인구 확충, ② 절대인구감소 충격완화, ③ 고령인구 증가 대응, ④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으로 나누어 순차 발표
  - ※ ※ (단기과제) 2020년까지 조치 가능 (중기과제) 현 정부 임기 내 조치 가능 (장기과제) 현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다음 정부에서 조치

## ㉔ 정책동향

### Ⅰ 인구정책 TF 핵심전략 및 정책과제 Ⅰ

4대 핵심전략		인구정책 20개 정책과제
생산연령인구 확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고용반)</li> <li>2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고용반)</li> <li>3 우수인재 유치, 외국인 정책 통합(외국인정책반)</li> </ol>
절대인구 감소 총격완화	저출산 완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제3차 기본계획 이행 및 제4차 수립(저출산고령사회위)</li> </ol>
	학령인구 감소 적응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교원수급 조정 및 학교시설 복합화(교육반)</li> <li>6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교육반)</li> </ol>
	병역자원 효율적 활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정예화(국방반)</li> <li>8 군인력 획득체계 개선(국방반)</li> </ol>
	지역활력 제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9 공공생활 서비스 체계 개편(지역반)</li> <li>10 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 지원(지역반)</li> <li>11 지역공모사업 연계·혁신(지역반)</li> </ol>
고령인구 증가 대응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 생산·제조현장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산업반)</li> <li>13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산업반)</li> <li>14 주택정책 방향 전환(국토반)</li> <li>15 인구구조를 반영한 도시공간 조성(국토반)</li> <li>16 주택연금 활성화(금융반)</li> <li>17 퇴직·개인연금 활성화(금융반)</li> </ol>
복지지출 증가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 재정관리시스템 개선(장기재정전망, 재정준칙)(재정반)</li> <li>19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복지반)</li> <li>20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복지반)</li> </ol>

- 세부 추진과제별 실행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추가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구체화 되는대로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하며, 주요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

※ 고령친화신산업 육성, 교원양성체제 개편, 고령자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등

※※ 2020년 예산안에 고령자계속고용지원금 신설(296억 원), 고령친화산업 R&D예산 확대(2019년 257억 원 → 2020년 401억 원) 등 기(既) 반영

## ㉔ 정책동향

- [추가과제] 2019년 4/4분기(2019.10~12월) 중 ‘제2기 인구정책 TF’ 를 구성하여, 인구정책 측면에서 중요하나 ‘1기 인구정책 TF’ 에서 논의되지 못한 과제와 국민 생활과 보다 밀접한 분야의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제2기 인구정책 TF’ 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
  -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구결과, 전문가 간담회, 각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과제발굴·확정 후 인구정책 TF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진행

## ㉕ 제1편 생산연령인구 확충

### 1.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고용반)

- [고령자 고용연장]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2019년 총 172억 원 → 2020년 예산(안) 총 192억 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2020년 예산(안) 296억 원 반영), △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확대\*\*\*\*(대상인원·지원요건 완화 등),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사업체 컨설팅\*\*\*\*\* 확대,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2022년)
  - ※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지원(2019: 27만 원 → 2020: 30만 원 인상)
  - ※※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
  - ※※※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전심사 후 적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현재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지급대상을 확대(2019 5천 명 → 2020: 6천 명)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완화된 지원요건 신설(2년 초과 고용 시 지급 → 1년 이상 고용)
  - ※※※※ 직무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숙련제도 시스템 도입(멘토제) 등(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2019년 예산: 142억 원 → 2020년 예산(안): 236억 원)

◆ (「계속고용제도」(안) 개요)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① 재고용, ② 정년연장, ③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고령자 재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 △중기 근로자 재취업 지원서비스\*와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확대, △장년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 (점진적 퇴직과 재취업 준비 지원)
  - ※ 개별 기업 방문, 온라인 서비스 등 중소기업근로자 대상 특화 서비스 제공
  - ※※ 경력진단 → 미래설계 → 훈련-취업알선 연계: (2019) 3만 → (2021) 5만으로 확대

## ㉔ 정책동향

- ※※※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보장 및 그에 따른 임금감소액 일부 보전 추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단축 비례한 임금보다 추가로 지급한 임금에 대해  
사업주 대상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대상) 등 지원(2019: 110억 원  
→ 2020(안): 144)

### 2.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고용반)

- [현장수요에 부합한 외국인력 도입·배정] △세부업종·직종별로 세분화하고  
각 분야의 인력 수요에 따라 외국인력 배정 및 고용한도 조정\*(적재적소 배정),  
△송출국 현지훈련을 통해 기능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알선·매칭 시  
사업주의 선택권도 강화\*\*\*
  - ※ (현행) 5개 업종(제조업, 건설업 등) 內 평가 점수에 따라 개별 기업별 선발·배정 →  
(개선) 업종 內 인력 부족 세부업종·직종에 포함된 기업 우선 고려 및 고용한도 상향
  - ※※ 필요직종 발굴 및 수요파악 → 송출국 현지훈련 → 직종별 신청사업장 배정
  - ※※※ (현행) 고용센터 직접 알선(3배수) → (개선) 사업주가 외국인정보 검색 후 선택
- [숙련 외국인력의 적극적 활용] △성실재입국 제도 개선\* 및 선발요건 조정, 대상  
확대\*\* 추진, △인력 부족이 심한 업종·직종을 중심으로 비전문인력(E-9)의 장기  
체류(E-7) 비자전환 규모 확대(2018: 600명 → 2019: 1,000명)
  - ※ 국내 취업 활동 후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제한 기간(현행: 3개월) 단축
  - ※※ 선발요건: 대상 외국인의 숙련도(임금수준·훈련 이수 등) 요건 추가  
선발대상: 사업장 확대(현재는 100인 미만), 동일사업장 근무 → 동일업종·직종 근무

### 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국인 정책 개편 (외국인정책반)

-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비자’ 를 신설하고 혜택\* 부여
  - ※ 장기체류, 가족동반, 취업허용 등 선별적 혜택 제공
- AI(인공지능)를 활용하여 적정 외국인 유입규모를 추산하고, 사회·경제적 영향 및  
고용시장 파급효과 등을 분석
- 인구감소지역 거주 우수 외국인에게 장기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거주인센  
티브제’ 검토
  - ※ 지방대(폴리텍, 기능대 등), 뿌리산업체 및 인구과소지역 제조업체 숙련기능공 등 우수외국인  
대상으로 선별, 일정기간 거주시 장기체류 허용
- 이민정책 환경 변화(체류외국인 증가, 외국인재·동포활용 등)에 대응하여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 구축\*
  - ※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 외국인·동포 관련 법률 전면재편 및 통합

## ㉔ 정책동향

### ◆ 총괄정책 동향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및 사회서비스 선진화로 포용사회 정착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9.9.19.)

### □ 개요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2019.9.19.] 정부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을 심의·확정
  - ※ (참석)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농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계청 청장, 법제처 차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수원시장 등
- (주요 내용)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지역산업·서민경제·주민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과제 개선, 개선사례를 모델 삼아 전 지자체에 확산·적용(표준조례안 마련·배포),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돌봄·건강·고용 등 개인적 수요와 문화·환경·안전 등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사회서비스 확대,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지하 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 2023년까지 구축,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R&D 추진 및 표준품질 관리로 정확도 개선

###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방안 (관계부처 합동)

- 금번 전환방안에서는 ① 지역 산업, ② 서민 경제, ③ 주민 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전환과제를 발굴
- ① ‘지역 산업’ 영역: 지역별 특화 산업의 업종·제품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유연화하는 과제 46건을 개선
  - (기대 효과) 신기술 촉진 체계가 구축되고 신산업 지원이 강화되며, 시장 진입 장벽이 해소되는 등 기존 산업이 활성화

## ㉔ 정책동향

- ② ‘서민 경제’ 영역: 지역의 핵심 경제주체인 △농·어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된 경직적 규정을 개선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를 다양화하는 과제 47건을 발굴  
- (기대 효과) 농·수산물 생산·판매가 촉진되고,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제약이 완화

---

◆ (농·어민) 농수산물 생산·판매 규제를 완화하고 농어민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농·어촌 경제 활성화 (19건)

---

- 농기계 임대사업 임차인 대상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기존** 임차인 자격을 김포시에 주민등록된 주민으로 한정 → 김포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부천, 인천)에 거주할 경우는 임대 불가

**개선** 김포시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모두 농업인(농지원부·임대차계약서로 증명)에게 임대 허용 (주민등록 제한 규정 삭제)

**효과** 김포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김포시 소재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

※ 부천·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인근 농민 100여 명 혜택

- 
- 농민 직영매장 설치 자격 범위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기존** 농민 직영매장 설치 신청자격을 ‘5년 이상 거주자’ 로 한정 → 최근 증가하는 신규 귀농인 및 타지역 거주자의 참여 곤란

**개선** 농·임·축산물 생산자라면 거주기간·지역에 상관없이 직영매장 설치 허용 (거주 기간·지역 제한 규정 삭제)

**효과** 양주·포천·의정부 등 주변 지역 농민,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농민에게도 농산물 직판매의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

- ③ ‘주민 생활’ 영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 및 △공공인프라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49건의 과제를 개선  
- (기대 효과)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화되고, 주민 안전·편의시설이 확충

## ㉕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 (관계부처 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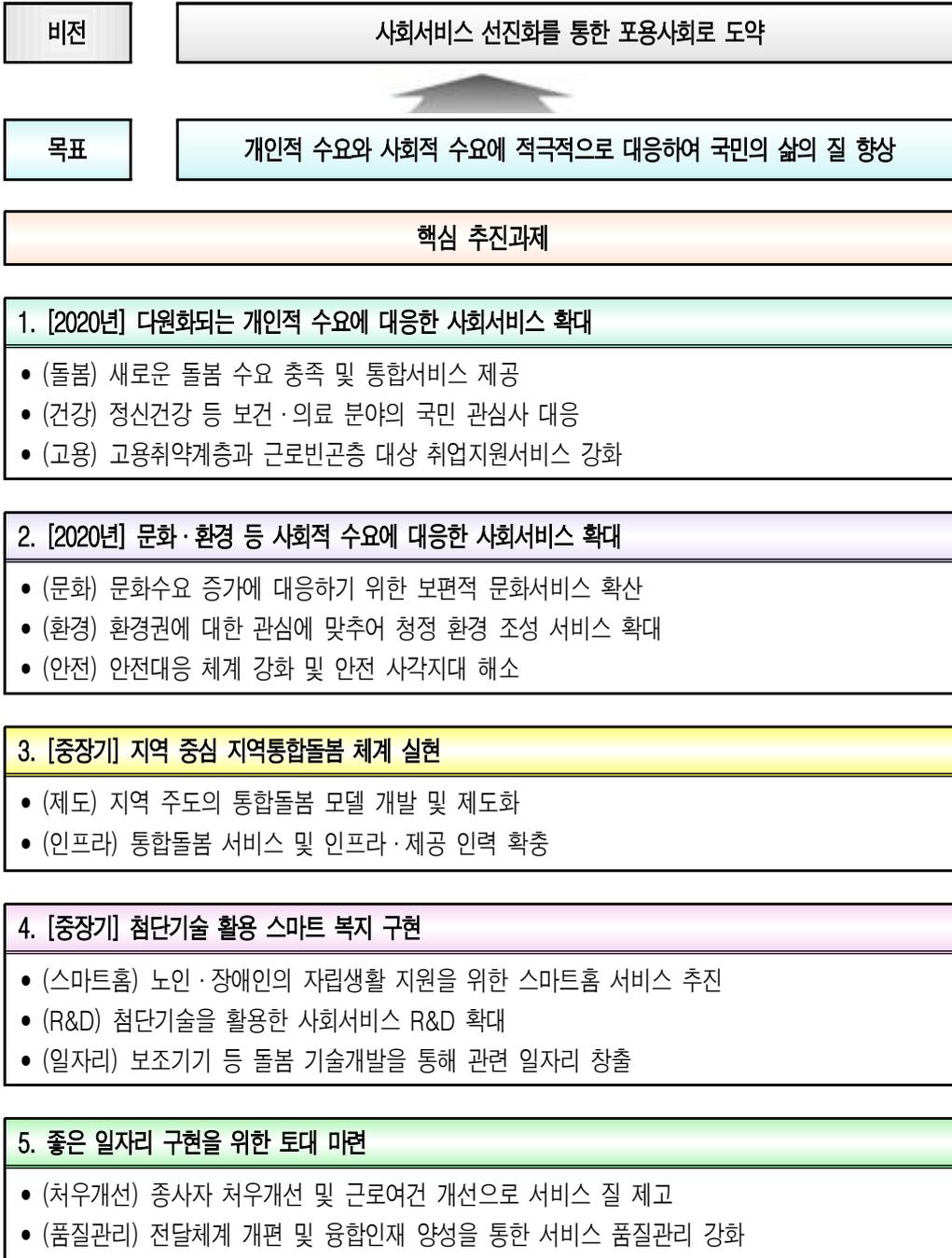
- 정부는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포용사회 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다양화되는 서비스 수요에 대한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를 추진할 예정
- ① [2020년] 돌봄, 건강, 고용 등 개인적 수요 대응  
- 새로운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를 개편(대상자 35만 명 → 45)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8.1만 명 → 9)를 확대할 계획

## ㉔ 정책동향

-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입원 시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8,400병상)하며,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긴급상황에 24시간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34팀, 204명)이 **신설**
-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64만 명 → 74)가 **확충**되며, **장애 유형·특성별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약 1만 명)될 예정
- ② [2020년] 문화·환경·안전 등 사회적 수요 대응
  - 문화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파견**(53명 212관 → 300명 1,200관)을 **확대**하고, **국민체육센터**(98개소 → 271), **스포츠클럽**(89개소 → 171)도 **확충**
  - 깨끗한 환경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10개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을 **운영**하고, **불법·방치 폐기물**을 **2020년에 전량 처리**
  -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난·사고 대응을 위해 **현장 소방인력**을 **확충**(56천 명 → 59)하고, **해경파출소 잠수요원 764명**을 **신규양성**
- ③ [중장기] 사회서비스 선진화 과제
  - 노인·장애인분들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요양병원·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
  -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구현을 위해 **스마트홈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 R&D 예산**을 **확대**
    - ※ (노인) 경기 부천시 250가구 / (장애인) 대구 남구 250가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단가**(+3.0%)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평균 +4.8%)를 **인상**하고,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1.2만 명**, **사회복지시설 교대 인력 2,885명** 등을 **충원**
- 향후 정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㉔ 정책동향

### ▮ 사회서비스 선진화 비전 및 추진과제 ▮



##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9.9.20.)

- [기획재정부,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019.9.20.] ① 「쌀 관세화 검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② 「WTO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 ③ 「글로벌 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과제」, ④ 「신남방 3개국 FTA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

### ♣ 쌀 관세화 검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에 대해 513% 관세화와 일정쿼터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허용하고 그 초과분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TRQ 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해 왔으나,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은 높은 관세율 및 TRQ 운영방식의 변동성 등을 이유로 WTO에 이의를 제기
-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하여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국가별 쿼터(CSQ)가 기존 TRQ(40.9만 톤) 내에서 배분되었고,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므로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
- 정부는 합의서 서명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쌀 관세화 검증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는 한편, TRQ 협상 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농업인 단체에 자세히 설명 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

### ♣ WTO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

-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WTO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WTO 개혁이 WTO 내 주요의제로 부각되었고, 개도국 특혜도 개혁과제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으나,
  - 지금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상품수출량 세계 6위 등 1996년 당시에 비해 우리 경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WTO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

## ㉔ 정책동향

-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그러나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
    - ※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은 없으며, 당분간 예정된 협상도 없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는 것**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
- 다만,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다음의 **3가지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갈 계획
  - 첫째,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둘째,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하며, 셋째,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 나갈 계획

### ♣ 글로벌 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과제

- 최근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주도로 WTO에서 전자상거래, 수산보조금 협상이 진행되는 등 **글로벌 통상규범 수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 또한, **CPTPP, USMCA** 등 최근 타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도 **규범의 수준이 상향**되고 새로운 규범이 등장
- 글로벌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WTO 체제의 유지·강화와 역내 무역체제 가입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 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선제적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
- ① **수산보조금 제도**, ② **국영기업 지원**, ③ **위생검역 강화**, ④ **전자상거래 제도** 등의 4가지 분야에 대해 글로벌 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WTO, RCEP,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등의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

### ♣ 신남방 3개국 FTA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

## ㉔ 정책동향

-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2019.11월 한-ASEAN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3개국과의 FTA를 최대한 연내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여 신남방 정책의 파트너인 **ASEAN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계기 마련

###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9.9.20.)

#### □ 개요

- [기획재정부,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2019.9.20.]
  - 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② 혁신성장 성과점검 및 추진체계 보완방안,
  - ③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주요입법 추진 및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 등 논의

※ 앞서 정책동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참고

#### □ 주요 내용

- [혁신성장 성과점검 및 추진체계 보완방안]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 중이나, **범부처 협업 및 정책 간 상호 연계 미흡** 등으로 **혁신성장을 붙임하기에는 부족**
  - 앞으로 ①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② **현장소통**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③ **혁신성장 토론회** 등 이벤트도 **적극 활용**
  - 그간 각 부처가 추진해 온 혁신성장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점검·분석**을 통해 **“혁신성장 보완·확산 전략”**을 마련하여 **2019.10월 중 혁신성장관계장관 회의에 보고**하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도 반영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입법 추진 및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뒷받침할 **입법이 신속하게 완료**되어야 하며,
  - 정부는 이들 핵심법안에 대한 국회 설득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하위법령 개정**과 적극적인 **유권해석, 지침 명확화, 실무 추진체계 정비** 등 행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조치들을 강구**할 계획

## ㉔ 정책동향

# 2019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9.9.18.)

## □ 개요

- [기획재정부, 2019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2019.9.18.]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2019.9.18일 「2019년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주요 중앙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
  - \* 시도경제협의회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시·도경제협의회」를 설치·운영
- (주요 내용) △지역혁신기관 지정 등 지역 주도의 분권형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별 우수 혁신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논의를 위한 ‘지자체별 혁신성장 추진사례 및 건의사항’ (각 시·도) 등을 논의

## □ 모두발언 주요 내용

### ♣ 혁신성장 추진현황

- 정부는 그간 ‘3+1 전략투자’ 및 ‘8대 선도사업’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3+1 전략투자’ 분야를 「데이터·5G·AI + 수소경제」의 플랫폼 중심으로 개편
- 또한, 금융 분야 API\* 구축 의무화, 스마트선도산단 실행계획 마련 등 선도사업 분야별 융합·실증·사업화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
  -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프로그램 간 통신에 사용되는 컴퓨터 언어형식으로 호환성이 높다는 장점을 보유
-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촉진 및 융합 R&D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혁신인재 양성·규제혁파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 기반을 견고히 확보해 나갈 계획

### ♣ 균형발전

## ㉔ 정책동향

-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속에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2019.1월)하여 추진 중
  - 예타 면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019.1월) 및 **생활 SOC 3개년 계획**(2019.4월) 등을 **수립·추진** 중
  - 지방이 자신의 ‘일’을 자신의 ‘돈’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집행·책임지도록 실질적인 **재정분권**도 **추진** 중
  - 또한,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 전략을 중앙부처들과 다년간 협약하여 추진하는 **지방투자협약제도**도 **올해**(2019년) **처음으로 시행** 중
- 아울러, 2019년 상반기에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였고, 재정 측면에서 **추경 및 목적예비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도 지속**

### ♣ 지역혁신체계 개편 및 지역혁신활동 강화

- 지역 현장에서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을 연계하여 **혁신성장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현장 혁신 활동**과 **기업투자 여건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

### ♣ 지방재정 집행 실적 제고

- 2019.9.18일 개최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안건이 논의
- 재정이 현장에서 온기를 발휘하기 위해 최종 집행단계인 **지방재정의 집행실적 제고**가 **절실한 상황**
-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직결되는 **지방재정 집행수준**(예년 집행률 84~85%)이 2019년에 역대 최고인 **90% 이상 달성**되도록 **집행실적을 점검·독려**해 주시길 당부

## ㉔ 정책동향

### ▣ 시·도별 주요 혁신사례 ▣

지역	지역 상황	혁신 내용
부산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 심화로 고용상황 정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高風당당 프로젝트」 추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시·교육청 통합 고졸취업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정보·상담 등 원스톱 제공</li> <li>6개월 이상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목돈 마련 및 장기재직 유도</li> </ol> </li> </ul>
대구	지역청년인구 유출 및 중소·중견기업 인력난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경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HuStar) 추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수요맞춤형 커리큘럼 운영(대학 3~4학년)</li> <li>대학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신산업 실무 교육</li> <li>혁신대학·아카데미 졸업생 등에게 교육지원금을 제공, HuStar 참여 기업에게 인턴비 지원</li> </ol> </li> </ul>
인천	인천 역외소비율(52.8%)이 전국 최고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인천 e음’ 카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바일 어플 및 선불카드를 통한 사용 활성화* (2019년 말까지 가입자 119만 명, 발행액 1.7조 원 예상)</li> <li>* 사용액 캐시백(6~10%), 소득공제(30%) 제공, 결제수수료 절감, 인천 e몰 무료 입점 등 지원</li> </ul> </li> </ul>
광주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상생 지역일자리 모델구축 →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li> <li>빛그린산단 內 노동자 공동복지 프로그램 마련 및 광주형 일자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li> </ul> </li> </ul>
세종	안전하고 저렴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농상생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세종로컬푸드 설립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싱싱장터 도담·아름점), 싱싱문화관 준공*</li> <li>* 일자리 1,000명 창출, 누적 매출 690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li> </ul> </li> <li>향후 로컬푸드 직매장 3·4호점 구축 및 공공급식센터 운영 추진</li> </ul>
경기	지역특성을 살린 드론산업 육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드론 실증도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을 활용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li> <li>* 드론 전용공역 연구용역 추진 → 국토교통부에 시범 공역 유치 신청 → 수도권 최초 시범공역지 선정(화성시)</li> <li>비행통제센터 및 활주로 200m x 20m 구축</li> </ul> </li> </ul>
강원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한 사회안정망 부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회보험료 부담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1인 자영업자 대상 전국 최초(2018년)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li> <li>* 월평균보수액 210만 원 미만 근로자 39천 명 등 지원</li> </ul> </li> </ul>

## ㉔ 정책동향

지역	지역 상황	혁신 내용
충북	지역 기업에 대한 전력공급 지연에 따라 생산 차질 우려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조기전력공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법시행령 등을 적극 적용(동절기 공사 금지기간에 굴착이 가능하도록 긴급소통공사 허용)하여 전력공급시설 공사기간 단축(13개월)</li> <li>- 기업 조기 가동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650명)</li> </ul> </li> </ul>
충남	산업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와 관련하여 고충사항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자체에 귀속된 산업단지 가로등 등의 전기요금을 명확히 하기 위해 114개 단지 전수조사 추진 → 기업에게 전가되던 전기요금 일부를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요구</li> <li>- 481개 기업, 연간 약 2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li> </ul> </li> </ul>
전북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GM 군산공장 폐쇄로 협력업체 휴·폐업 증가 및 대규모 실업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위기지역 세제지원을 통한 투자촉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기지역 지방세 지원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징수유예, 기한연장, 체납처분 연장,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li> </ul> </li> <li>② 자동차·조선산업 부동산 취득세 면제 등 전북 도세 감면 조례 개정(전국 최초)</li> </ol> </li> </ul>
전남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고 주민주도의 성장기반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道 차원의 주민참여형 대규모 지역발전 사업계획*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매년 400억 원, 4개 사업)</li> <li>* 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선정, 협약체결(2019.9.) → 시·군 예산교부 및 사업착수(2020.1.)</li> </ul> </li> </ul>
경북	일본 수출규제 본격화에 따른 경북지역 소재부품 분야 위기 극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북 소재·부품 종합기술 지원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道, 7개 시·군)·대학·R&amp;D기관(16개)·기업부설연구소가 연합하여 종합기술 지원단 구성, 소재부품 6개분야*별 분과위 운영**</li> <li>*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li> <li>** 일본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 국산화 과제 73건 발굴 등</li> </ul> </li> </ul>
경남	제조업 생산성 제고를 통한 혁신성장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공장·산단 추진을 통한 제조업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원산단의 스마트선도산단*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3개 사업, 총사업비 1조 6,550억 원</li> </ul> </li> <li>-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공장 2,000개 구축(~2022년), 스마트 전문인력 8,000명 양성(~2022년), 전국 최초로 스마트공장 기업부담분 중 20%를 지방비로 지원 등</li> </ul> </li> </ul> </li> </ul>
제주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인한 혁신기술 활용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도&amp;카카오맵 스마트 모빌리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기술 및 고정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차선 구분이 가능한 cm급 대중교통 실시간 서비스 등 최초 제공*</li> <li>*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 → 국내 최초 버스 위치 정보 개선</li> <li>- 제주 위치 정보를 국가 중점 데이터로 개방</li> </ul> </li> </ul>

## ㉔ 정책동향

### 전국 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 개최

자료 : 행정안전부(2019.9.18.)

- [행정안전부,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 개최, 2019.9.20.~2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019.9.18일 전국 읍면동장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재개발원에서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을 개최
  - (개최 목적) 새정부 3년차 핵심국정운영 기조인 ‘혁신적 포용국가’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혁신 등 핵심국정과제 공유를 위해 마련
  - (주요 내용) △새 정부 3년차 핵심국정운영 기조인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공유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읍면동장의 역할 당부, △재정분권·균형발전, 지방행정혁신 등 복합·혁신과제에 대한 지자체 공감대 확산 및 정책 추진방향 제시
  - (기대 효과)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읍면동장의 핵심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정 운영의 추진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대국민 재도전 권장 캠페인 2019 실패박람회 개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2019.9.19.)

-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2019 실패박람회\* 개최, 2019.9.20.~22.]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국민 재도전 권장 캠페인 「2019 실패박람회」가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 슬로건으로 2019.20일부터 9.22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
  - ※ 실패박람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의 다양한 실패경험을 나누고 재도전을 장려하여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개최해 온 공공캠페인으로 올해는 춘천, 대전, 전주, 대구 등 4개 지역별로 지난 2019년 5월과 6월에 걸쳐 지역별 박람회가 열렸으며, 이번 실패박람회는 올해 캠페인을 매듭짓는 종합 박람회
  - (주요 내용) △국민참여 프로그램·#Fail-better 캠페인, 국민사연 공모전, 인식변화 관찰탐험, 실패처방전, 마음해우소, △전시·문화 프로그램·리버스영화상, 마켓 프로그램, KT#청춘해콘서트, 도전 로컬스타, 과장창 등, △강연·토론 프로그램·사회적 가치 컨퍼런스, 멘토-멘티 토크콘서트, 도전의 위대한 실패이야기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재창업 경진대회, 부활마켓, 재도전 정책마당 등

## 농어업인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시행

자료 : 환경부(2019.9.17.)

-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2019.9.27.~]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019.9.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9.27일부터 시행, 다만 취약계층 범위 확대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 ※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2019년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 조치
- (추진 배경) 법률 개정(2019.3.26. 공포)으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근로자\*가 아니면서 **옥외(아외)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되도록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
  - ※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로서 자영업자인 농어업인 등은 제외
  - ※ ※ (변경 전)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음.
- (주요 내용)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
-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 혜택**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혜택〉
◆ 법 제23조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시 야외 단체 활동 제한, 종사자 교육 등 보호 대책 마련·이행 중*
※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은 고농도 대응 매뉴얼 마련·운영 중,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 공기청정기 등) 설치, 마스크 보급 지원 등 소관 사무에 대해 보호조치 마련·이행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밀집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행정 우선 지원* 가능
※ △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 어린이 등 통학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 수목 식재 및 공원조성, △ 학교 등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마스크의 보급 등

## ㉔ 정책동향

### ◆ 농업·농촌 동향

## 차(茶)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9.20.)

- [농식품부, 「차(茶)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발표, 2019.9.20.] 차(茶)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산 차 품질 차별화** 및 **소비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 「차(茶)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발표

- (주요 목적) 커피, 수입차\* 등의 국내 음료시장 잠식에 대응하여 **우리 차 품질 및 소비자의 우리 차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세계 다류(茶類)시장 규모: (2015) 869억 달러 → (2018) 972억 달러 (11.6%↑)

※ 세계 커피시장 규모: (2011) 1,400억 달러 → (2015) 1,256억 달러 (10.2%↓)

※ 차류 수입량: (2015) 807톤 → (2018) 1,514톤 (87.6%↑) / 주요 수입국: 중국, 스리랑카 등

### ▮ ‘차(茶)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목표 및 기본방향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기반 구축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차 산업 활성화</li> <li>⇒ 생산량 / 단수: (2018) 4,000톤 / 148kg/10a → (2022) 7,000톤 / 180kg/10a</li> <li>⇒ 차 수출액: (2018) 6백만\$ → (2020) 8백만\$ → (2022) 1천만\$</li> </ul>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우리 차 품질 향상, 제품 차별화 및 문화 확산을 통한 국내외 인지도 제고 및 성장 동력 창출</li> <li>◆ [단 기] 국산 차 소비 활성화 및 생산·가공·유통·소비 단계적 지원체계 구축</li> </ul>
중점 추진 과제	① 생산경영 여건 개선
	② 우리 차 고부가가치화 및 유통수출 활성화
	③ 차 소비자변 확충 및 전통문화 보전

- (다원 육성 및 생산성 제고) 평지다원 산업화 및 전통 차밭의 경관조성, 기계화 및 시설 현대화
- (조직역량 강화) 차 산업계 협의체 구성 및 자율관리 활성화, 자조금 조성
- (생산단계 품질 제고) 경영 안전망 확충, 기초연구 활성화, 친환경재배 확대
- (품질인증 강화 및 신뢰 제고) 품질인증 확대 및 관리 강화, 품질표시제 정비

- (차 연관 가공산업 활성화) 공동가공센터 구축 및 가공품질 제고, 기호 맞춤형 품종 및 제품 R&D 활성화
- (대표브랜드 육성 및 유통·수출 활성화) 우리 차 브랜드 육성, 전략품목 개발 및 마케팅 강화

- (차 소비자변 확충) 우리 차 공공급식 음용수 보급, 교육·전문인력 양성, 신세대 대상 전략적 홍보 등 우리 차 일상화 홍보
- (차 문화 보전·계승 지원 및 문화상품화) 농업유산 보전 및 홍보, 다원 융복합산업화, 박람회·품평대회 등 관련 행사 활성화

## 아침간편식 지원 시범사업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9.16.)

- [농식품부, 아침간편식 지원 시범사업 추진, 2019.9.16.] 전남 영암군에 소재한 **대불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9.9.16일부터 쌀 가공식품을 이용한 아침간편식 제공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추진 목적) 학생들의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 추세를 완화\***하고, **쌀 간편식을 아침밥**으로 섭취하는 **문화의 확산**을 통해 **쌀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 처음으로 시작
    - ※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 (6~11세) 2005년 11.3% → 2017년 11.9, (12~18세) 2005년 23.8% → 2017년 35.4
  - (주요 내용) △아침 간편식 지원 시범사업은 **3개 지역(인천, 전남, 강원) 8개 초등학교**가 참여, **2,230명의 초등학생**에게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간편식을 제공,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고, 최근 3년간 위생 관련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기업에서 **국산 쌀로 제조한 제품**을 제공하며, **주먹밥류, 씨리얼류, 떡류** 등의 **간편식(1인당 120g 내외)**이 **음료와 함께 주 2~3회 제공**

### 〈초등학생 아침간편식 지원사업 개요〉

- ◆ (추진 배경) 쌀 가공식품 기업의 초등학생 대상 아침 간편 급식 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쌀 가공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초등학생 건강 증진
- ◆ (사업 목적) 초등학생에게 아침에 쌀 간편식을 제공하고,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쌀 간편식 선호도 및 개선 방향 조사
- ◆ (사업 규모) 3개 지역(인천, 강원, 전남), 8개 학교, 2,230명
- ◆ (예산·기간) 3.5억 원, 2019.9.6.~2019.11.15.(주 2~3회, 총 21회 제공, 회당 4천 원)\*
  - ※ 전남지역 3개교는 2019.9.6일에, 그 외 지역 5개교는 추석 배송 등을 고려해 2019.9.16일 일제 시작
- ◆ (제공 품목\*) 주먹밥, 떡, 약밥, 그레놀라바, 씨리얼 등
  - ※ HACCP 인증 획득, 3년간 위생 관련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은 기업의 제품 중 '아침 간편식 참여 기관 협의회' 의 논의를 거쳐 개별학교에서 선정한 제품

## 2019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성공적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9.20.)

- [농식품부, 2019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성공적 개최, 2019.9.20.] 농식품부가 지난 2019.8.30.일부터 8.31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2019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가 청년 구직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
  - ※ 연령별: 10대(35%), 20대(51%), 30대(6.7%) 등
  - ※ 지역별: 경기(19%), 서울(18%), 충남(14%), 충북(9%), 대전(6%), 경남(6%), 전북(6%), 강원(4%), 전남(3%), 경북(3%) 등
- (주요 결과) △채용...농식품 공공기관, 민간기업, 농협 등 155개 기업·기관 참여, 전년 대비 1.3천 건이 증가한 6.3천 건의 1:1 채용상담 실시, △창업...창업에 성공한 청년 창업자가 노하우를 직접 전수하고, 창업에 필요한 실무 컨설팅을 함께 제공, 창업 상담실적은 전년의 5배 수준인 482건 기록, △유망일자리...치유·휴양, 반려동물 등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의 직업 정보와 체험 기회가 제공되었고, 940건의 상담 실시
- (향후 계획) 박람회 참가자의 취업 여부 등 모니터링 및 누리집 상시운영

## 제12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9.19.)

- [농식품부, 제12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 개최, 2019.9.24~26., 서울] 농식품부는 OECD와 함께 회원국 간 네트워크 강화 및 각국의 농촌정책 공유·확산을 위해 ‘농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농촌발전 컨퍼런스’를 2019.9.24일~9.26일까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및 전북 완주 등에서 개최
  - ※ 울릭 베스터가드 크누센(Ulrik Vestergaard Knudsen) OECD 사무차장 등 임직원, OECD 회원국의 농촌정책 담당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 총 300여 명이 참여하며,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
- (주요 내용) △기간 및 장소...2019.9.24.(화)~26.(목), 서울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컨퍼런스, 9.24~25.) 및 전북 완주(현장방문, 9.26.), △주요 내용 및 행사...한국 농촌정책의 우수사례와 발전 방향 및 향후 과제 공유 / 세계화, 기술혁신, 인구구조 및 기후·환경 변화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새로운 OECD 농촌정책의 원칙 공유·확산 / 한국의 로컬푸드 및 농촌 사회적 경제 성공모델 현장방문

## ㉔ 정책동향

### ◆ 축산 동향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주요 동향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9.9.17./9.19.) · 보건복지부(2019.9.17.) · 농림축산식품부(2019.9.17./9.18./9.19./9.20.) · 환경부(2019.9.19.) · 행정안전부(2019.9.20.)

- [농식품부, 경기 파주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2019.9.17.] 2019.9.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다고 밝혔으며, 2019.9.1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급변 ASF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을 심의·확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 (신고접수) 해당 농장에서는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함에 따라 2019.9.16일 18시경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 (확진 판정)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2019.9.17일 오전 6시 30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
  - (조치 사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 △남은음식물의 양돈 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
    - \*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함으로써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
    - \*\* 2019.9.17일 0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으며,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 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 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
  - (농가 및 지자체 당부) △지자체…ASF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 양돈 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은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전국 축산 농가 모임·행사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

## ㉔ 정책동향

- [농식품부,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2019.9.18.]  
2019.9.17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4,700두, 일관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2019.9.18일 오전 7시경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확진\*
  - ※ 국내 ASF 확진(총 2건): 1)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 - 2019.9.16일 신고 → 2019.9.17일 확진, 2)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 - 2019.9.17.일 신고 → 2019.9.18일 확진
- (조치 사항)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발생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하여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밖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집중할 계획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3주간 중요, 대응 철저, 2019.9.20.] 지난 2019.9.16일 파주, 9.17일 연천 소재 돼지농가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고, ASF로 순차 확진(2019.9.17일, 9.18일)된 이후 2019.9.20일 09시 현재까지는 의심축 등에 대한 추가 신고는 없는 상황
  - (주요 내용) △2019.9.20. 06시 기준, 돼지 10,372두를 살처분·매몰, △ASF 전파 여부 확인을 위해 총 544개 농장 정밀검사 진행 중(2019.9.19. 16시 기준, 총 104개 농장에서 채결되어 총 56개 농장에 대한 검사 완료, 모두 음성 판명), △ASF 발생 위험이 높은 특별관리지역(접경지역 14개 시·군) 등 전국 취약지역 돼지농가 1,494개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2019.9.19.)를 하였으며, 2019.10.4일까지 완료할 계획, △2019.9.20.일 축산 관련 사업장 대상\*\*\* 일제 점검, △돼지고기 도매가격·(2019.9.17.) 5,838원/kg → (9.18.) 6,201 → (9.19.) 5,828(18시 기준)
    - ※ 특별관리지역 농가 624호, 전국 밀집사육단지 617, 발생 이전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227, 방목형 농장 26
    - ※ ※ 점검대상: 돼지 관련 도축장 71개소, 배합사료공장 88, 인공수정소 51개소 등
- [농식품부,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 2개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 2019.9.20.]  
2019.9.20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 2건\*(적성면 1, 파평면 1)이 접수
  - ※ 적성면 소재 1개 농장: 축주가 돼지 2두(모돈 1, 육성돈 1) 폐사를 확인, 파주시에 의심 신고(\* 적성면 소재 농장: 돼지 3천여 두 사육 / 연천 발생농장에서 약 9km에 위치)
  - ※ 파평면 소재 1개 농장: 동물병원 수의사가 축주와의 통화에서 돼지 1두(모돈) 폐사를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심 신고(\* 파평면 소재 농장: 돼지 4,2천여 두 사육 / 연천 발생농장에서 약 7.4km에 위치)

## ㉔ 정책동향

- (방역 조치) 농식품부는 신고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각 2명)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진되는 경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
- [이낙연 국무총리, 경기 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관련 긴급지시, 2019.9.17.]  
2019.9.16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

<이낙연 국무총리 경기 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관련 긴급지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에 감염 시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고, 아직까지 <b>치료법</b>이나 <b>백신</b>이 <b>없어</b> <b>확산</b> 시 <b>국내 양돈산업</b>에 <b>큰 타격</b>이 예상되는 만큼, <b>농식품부 및 관계부처</b>는 강력한 <b>초동대응</b>으로 <b>바이러스 확산</b>을 <b>조기에 차단</b>할 것</li> <li>◆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b>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sup>※</sup>)</b> <b>발령</b> 및 <b>발생농장</b>과 <b>500m</b> 이내에 있는 <b>돼지</b>를 <b>살처분</b>하는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일시적 이동중지 명령/ 2014.1월 시 발생 시 첫 시행</li> </ul> </li> <li>- 역학조사를 통해 <b>전파원인</b>을 신속히 <b>파악</b>하여 차단하고, <b>이동통제소</b> 및 <b>거점별 소독장소 운영, 축사</b>와 <b>농장 출입 차량</b>에 대한 <b>소독</b> 등 <b>현장방역</b>이 <b>철저</b>히 이행</li> <li>- 특히, 주요 전파요인인 <b>남은 음식물</b>을 <b>돼지</b>에게 <b>먹이는 것</b>을 <b>금지</b>하고 <b>농장의 이행 여부</b>를 <b>확인</b>, 이와 함께 <b>환경부</b>와 <b>협조</b>하여 <b>발생지역의 야생멧돼지</b> <b>예찰</b>을 <b>강화</b>하고 <b>양돈농장 접근</b>을 <b>차단</b>할 것</li> <li>◆ 또한, 외교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불법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한 <b>여행객 홍보 강화</b> 및 <b>일제검사 확대</b> 등 <b>국경검역</b>을 <b>철저</b>히 하여 바이러스가 국내로 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li> </ul>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경기 파주 ASF 발생 긴급 대책회의\* 개최, 2019.9.17.]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됨에 따라 **2019.9.17일 관계부처 장관**(농식품부·행정안전부 등) 및 **17개 시·도 단체장** 등과 긴급 ASF 방역 대책회의를 개최
  - ※ (참석) 농식품부·행정안전부·국방부·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무2차장, 경찰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경기·강원도지사, 인천부시장 등
- (**주요 내용**) ASF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돼지**에 **감염** 시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등 국내 양돈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강화된 만큼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 △**ASF 조기 퇴치 사례**와 **비결**을 **신속히 파악·활용**하고, 만약 본받을 만한 사례가 없으면 우리가 **조기 퇴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하게 주문

## ㉔ 정책동향

〈이낙연 국무총리 당부사항〉
① 농식품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발생농장 및 관계농장에 있는 돼지를 살처분하고, 거점별 소독시설 운영, 축사와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등 현장방역 철저
② ASF의 주요 전파 원인인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야생멧돼지가 양돈 농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발생지역 예찰 강화
③ 발생지역 외에도 전국의 6천여 양돈 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방역 및 신고요령을 세밀하게 교육·홍보
④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전파 원인을 찾아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
⑤ 외교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불법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여행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발생국 여행객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국경검역 철저
⑥ 환경부에서는 남은 음식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
⑦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점도 널리 알릴 것

- [질병관리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체감염 무해 홍보, 2019.9.1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와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홍보자료 제공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개요〉
◆ (정의) African Swine Fever Virus(ASFV)가 원인균이며, 돼지, 멧돼지에서 발생하는 중증출혈성 질환
◆ (인체감염위험) 유럽식품안전국(EFSA)은 인간이 ASFV에 감수성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인간건강의 위협요소는 없다(ASF is not a human health threat)고 평가
※ ASF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이며 인수 공통감염병은 아님.
◆ (특징) 전염력이 높고, 잠복기는 평균 2~10일이며 돼지에서 치명률은 약 100%, 야생 돼지, 멧돼지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식품, 사료 무생물 매개물에 의해서도 국가 간 전파 가능
◆ (예방 및 치료) 현재까지 백신과 알려진 치료제는 없음.

- [이낙연 국무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 방문, 2019.9.19.]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9.9.19일 오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농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하여 방역상황 종합점검 및 근무자 격려
  - ※ 2019.9.17일 경기 파주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방역대책 상황실을 9.17일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하여 운영 중,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 차관을 상황실장으로 6개반 구성·운영(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파견을 받아 ‘현장지원반’ 운영 중이며 상황실 파견 관계부처(5개, 사무관급)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 ㉔ 정책동향

- [환경부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 점검, 2019.9.19.] 조명태 환경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 연천에서 발생함에 따라, 2019.9.19일 오전 아산시에 있는 멧돼지 포획시설을 찾아 지자체의 멧돼지 관리 및 남은 음식물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조치를 당부
  - (주요 내용) △남은 음식물의 돼지급여가 전면 금지되므로 남은 음식물이 부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체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 △연천 양돈 농가 주변 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하여 인근 멧돼지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 예정, △북한에서 유입되는 임진강, 한탄강, 한강하구 등 경기북부 지역 하천수에서 바이러스 검사 추진
- [행정안전부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위한 현장점검, 2019.9.20.]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9.9.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북도 진천군의 방역실태를 점검
  - (주요 내용) 거점소독시설, 이동통제초소 및 농가초소가 현장에서 적절하게 설치·운영되는지 여부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중점 점검\*
    - ※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를 ‘범정부대책지원본부’로 격상하고 방역당국과 ASF 중점관리지역에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를 현장에서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해 줄 것을 요청

## ㉕ 참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2019.9.20.)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2019.9.19. 23:00 기준) ▮

구분	총계(2019.09.16.~현재)			비고
	확진	검사 중	계	
발생농장 수(호)	2	-	2	

시군	살처분 대상		살처분·매몰 실적				잔여 두수	
			2019.9.19.		누계			
	농장(호)	두수(두)	농장	두수	농장	두수	농장	두수
파주	3	4,927	-	-	3	4,927	-	-
연천	4	10,732	1	1,525	1	2,324	4	8,408
합계	7	15,659	1	1,525	4	7,251	4	8,408

주: 발생 및 살처분 현황(2019.9.19. 23:00 기준): 경기 파주 1건(2019.9.16.), 연천 1건(2019.9.17.) / 계획(연천):3개 농가는 2019.9.20.일 12:00 완료, 1개 농가는 조속히 마무리

- [중점관리지역] 파주·연천·포천·동두천·철원·김포 6개 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강력한 방역조치 시행

## ㉔ 정책동향

- (소독) 소독차량 31대 동원 437호 소독, 생석회 17,900포 공급·도포
- (관리) 거점소독시설 10개소, 통제초소 30, 농가초소 267 설치·운영
- (출하) 3주간 타지역 반출 금지 및 지정된 도축장(4개소)에만 출하 가능
- [전화예찰] 방역지역, 차량·도축장 역학 농가 중 588 이상 무(無)
  - 파주는 방역대 내(44호), 차량역학(280호), 도축장역학(177호) 501호, 연천은 방역대 내(63호), 차량역학(157호) 200호 대상 전화 예찰 중(미응답 163농가 SNS 조치)
- [정밀검사] 파주 역학 관련 및 방역대 내 324농가 대상 검사 실시 (채혈 70, 음성 30), 연천은 역학 관련 및 방역대 내 220농가 (채혈 34, 음성 26)
  - 14개 특별관리지역(경기 7, 강원 5, 인천 2)으로 확대하여 검사 추진 예정
- [반출제한] 경기·인천 소재 사육돼지 타 시도 반출금지(2019.9.17.~9.24., 1주일간)
-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점검] 중앙합동 점검반 9개 시도 86개 시군구 32개반 64명 동원, 지자체 및 축산시설 등 점검(현지지도 6건)
- [소독] 2019.9.19일 소독차량 843대 동원하여 양돈 농가 6,300호 소독 실시

## ㉕ 최근 돼지고기 가격·수급 동향

- [국내 돼지고기 수급 상황] 2019.8월 말 기준 국내 돼지 사육마릿수\*는 1,227만 마리(이력제 기준)로 평년 대비 약 13% 많고, 2019.1~8월까지 수입물량\*\*은 31만 3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으나, 평년 대비 24.2% 증가
  - ※ 사육마릿수: (평년) 10,831천 마리, (2019.8.) 12,276
  - ※ ※ 수입물량: (평년) 252천 톤, (2016) 319 → (2017) 369 → (2018.1.~8.) 329 → (2018) 464 → (2019.1.~8.) 313
- 2019.6월 말 기준 육가공업체 등의 재고물량\*도 18만 5천 톤으로 평년 대비 105.5% 증가하여 공급물량은 충분한 상황
  - ※ 재고물량: (평년) 90천 톤, (2018.6.) 128.5 → (2019.6.) 185.2(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추정)
- 2019년 상반기에는 물량 공급이 많아 가격이 평년과 전년에 비해 낮았고, 2019.8월 평균 도매가격도 4,179원/kg으로 평년 동월 대비 15.6% 낮은 수준이었다가, 9월은 추석(2019.9.13.)을 앞두고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전월 대비 7.9% 상승(4,509원, 2019.9.1.~10.)하는 추세

## ㉔ 정책동향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3,853	4,114	4,063	4,439	4,635	5,192	5,120	4,838	4,909	3,911	3,675	3,597
2019년	3,241	3,143	3,768	4,370	4,159	4,200	4,076	4,179	4,509*	-	-	-
평년	4,030	4,054	4,281	4,577	4,821	5,320	5,044	4,955	4,710	3,972	4,371	4,147

주: \*는 2019.9.1.~10. / 단위: 원/kg

- 최근 국내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19.9.16일 4,403원/kg에서 9.17일(5,838원), 9.18일(6,201원) 으로 각각 32.6%, 40.8% 상승
  - ※ 도매가격 조사방법: 12개 축산물 공판장·도매시장의 돼지고기 경락가격 평균
  - ※ 거래물량/가격: (2019.9.16.) 2,115마리/4,403원/kg → (9.17.) 2,285/5,838 → (9.18.) 387/6,201
- 이는 2019.9.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전국적인 이동중지명령(9.17. 06:30~9.19. 06:30, 48시간)이 발령됨에 따라 일시적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
- 2019.9.19일 06시 30분 이후 이동중지가 해제됨에 따라 오후부터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돼지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그동안 일시이동중지에 따라 출하되지 못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 또한 조속히 안정화될 전망
- 2019.9.17.일, 9.18일 도매가격은 올랐지만, 소비자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
  -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2019.9.16일 2,013원/100g, 9.17일 2,029원, 9.18일 2,044원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
    - ※ 전국 19개 시·도, 45개 전통시장·대형마트 등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
  - 대형마트 등이 1~2주 정도의 물량을 자체 확보하고 있어서 도매가격의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파악
-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우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체감염이 없어서 사람의 건강에는 무해하며, 유통 전 모든 돼지고기를 도축장에서 철저히 검사하여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중에 공급하며, 우리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 주길 당부
  - 농식품부는 돼지고기의 수급·가격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농협·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

## **아젠다발굴** 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등

### 이슈 브리프 1 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출처: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9-2028’, 2019.7.8.)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개요>

- OECD는 FAO(UN 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발간한 「2019-2028 농업전망」을 통해 농식품 수요 성장세 둔화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공급 증가로 향후 대부분 품목의 실질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 <소비>

- [총괄] 농산물은 식품, 사료, 연료, 기타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인구·소득·소비자 선호 등이 수요에 영향
  - 그동안은 주로 식품으로 소비되었으나, 최근 사료·연료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져 특히 축산물에 대한 소비 증가로 축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일부 곡물은 식품용보다 사료용 사용이 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식품] 식품으로 사용되는 농산물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
  - 곡물·콩 등의 소비 증가는 주로 인구 증가에 따른 것이고, 육류·유제품 수요 증가는 인구 및 1인당 소비량 증가에 기인함.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쌀, 밀, 유제품 등임.
  - 아프리카 등 저소득 국가는 곡물·감자·콩 등이 하루 총 영양 섭취 및 단백질 섭취의 약 70%를 차지하고, 유럽 등 고소득 국가는 육류·유제품 등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소득, 도시화, 건강 및 환경에 대한 관심 등이 식품 소비를 변화시킴.

## ㉔ **아젠다 발굴**

- ◆ 소득 증가에 따라 중국·동남 아시아 지역은 돼지고기·닭고기, 인도는 유제품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 도시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간편 가공조리 식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설탕·식물성 오일 소비가 증가
- ◆ 비만을 상승, 고당분·고지방 소비에 대한 건강상 우려 등에 따른 설탕세, 식품표시제 등 국가들이 설탕·지방 소비 감소를 위해 도입하는 정책도 식품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 ◆ 건강·환경에 대한 관심은 가금류 소비 증가·쇠고기 소비 감소, 식물성 오일 소비 감소·버터 소비 증가의 모습으로 나타남.

- [사료] 향후 10년간 사료용 농산물 소비는 **연간 1.5%씩 증가**할 전망
  - 이는 **육류·유제품**에 대한 **수요**와 **생산시스템의 구조효율성**이 **사료용 농산물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됨.
- [연료] 에탄올·바이오디젤 등 **바이오 연료 사용은 2028년까지 약 18% 증가**할 전망
  - **에탄올 사용은 중국·브라질**, **바이오 디젤 사용은 인도네시아**에서 정책적으로 장려됨.

## <생산>

- [농작물] 향후 10년간 세계 농작물 생산은 **약 14% 증가**할 전망
  - **곡물류 384백만 톤**, **유지작물(콩 등) 84백만 톤**, **뿌리작물(감자 등) 41백만 톤** 증가 예상함.
  - **농지 면적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어 생산 증가는 **종자 개량, 비료, 질병 대응력 제고**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주로 기인
  - **생산 확대는 투자확대·기술격차 보완·수요 확대** 등에 따라 **대부분 개도국(남미, 인도,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생산성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환경 규제**가 **강한 유럽과 북미 지역**은 **생산 확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 [축산물] 향후 10년간 세계 축산물 생산은 **약 15% 증가**할 전망
  - 대부분 지역에서 **육류·유제품 생산 증가**는 **사육 가축 수 증가**와 **가축 마리당 생산량 증가**로 이루어짐. 우수 종축 육성, 고품질 사료, 사육방법 개선이 영향을 미침.

## ㉔ **아젠다 발굴**

- 향후 10년간 증가하는 **육류 생산량의 약 절반을 가금류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남미에서 가금생산 확대 폭이 클** 전망이다. **쇠고기**는 **미국·남미**, **돼지고기**는 **중국에서 높은 생산 증가**를 예상하고, **아시아 지역의 신선 유제품 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유제품 및 우유가공품**(버터·치즈 등)은 축산물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할 전망

### <무역>

- **[총괄]** **농식품 관세 감축** 및 **중국의 경제 성장** 등으로 **농식품 무역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농식품 순수출 지역과 순수입 지역이 구분되는**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 **북미 지역이 주요 곡물** 등의 **주요 수출 지역**이었으나, **향후 중남미 지역**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질** 전망
  - **오세아니아**는 순수출 지역이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증가**로 **순수출국**으로 변모
- **[수입]** **중국과 아프리카**가 **지속적으로 농식품 순수입 지역**이 될 전망
  - **중국**은 경제 성장에 따른 **식품 수요 증가**로 **2000년대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나 **향후 수입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아프리카 지역**의 **농산물 수입**은 **견고한 인구 증가**와 **연계**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이런 경향이 **계속**될 전망이다.

### <가격>

- **대부분 품목 그룹의 실질 가격**이 **하락**할 전망
  - **곡물류, 육류, 낙농품, 유지작물**(콩 등)의 **실질 가격**이 **현재 수준 이하**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며, 낮은 가격은 **소비자에게는 유익**하지만, 생산성을 충분히 높이지 못한 **생산자에게는 부담**이 되어 **정부 지원 요구**가 **커질 수** 있음.
- **대부분 품목의 실질 가격**이 **연간 1~2%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쇠고기·양고기**의 **하락**세가 **두드러질** 전망

## ㉔ **아젠다 발굴**

- 생산성 향상이 식품 수요 증가보다 빠르게 이루어져 **실질 가격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주요 품목별 전망〉

- **[곡물류]** 높은 재고량과 수요 증가세 둔화로 **실질 가격하락** 전망
  - 종자 개량, 신기술 보급, 비료 사용 효율화 등을 통한 생산성(단위 면적당 생산량) 향상이 **곡물 생산 증가**를 견인함.
  - 곡물 수요는 중국의 사료 수요 둔화, 1인당 곡물 소비량 정체 등으로 이전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전 세계 쌀 소비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2028년까지 67백만 톤 증가하고 계속해서 식품으로 주로 소비될 것으로 예측됨.
  - 밀 수출은 러시아, 옥수수 수출은 미국, 쌀 수출은 인도, 태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육류]** 수요 성장세 둔화와 사료 가격하락에 따른 생산 증가로 향후 **실질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 가금류를 중심으로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개도국의 영향으로 1인당 돼지고기 소비는 감소할 전망이다.
  - 개도국 중심으로 전 세계 육류 생산은 2028년까지 13% 증가하고, 쇠고기는 미주 지역 중심으로 확대, 돼지고기는 2018년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2019년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함.
  - 가축질병, 위생규제, 무역정책, 육류 소비의 건강·환경 영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이 향후 육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
- **[낙농품]** 세계 유제품 생산은 다른 품목에 비해 빠른 연 1.7%씩 증가하고, 개도국의 수요 증가에 따라 **신선 유제품 소비**가 늘어날 전망
  - 유제품 생산은 인도와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소득 증가에 힘입어 인도 등의 1인당 신선 유제품 소비 증가, 북미·유럽 지역에서는 버터·치즈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㉔ **아젠다 발굴**

### 이슈 브리프 2 **일본 인구감소지역 대책 입법 동향**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일본 인구감소지역 대책 입법동향, 「과소지역자립 촉진특별조치법」의 제정 및 최근 개정을 중심으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vol.04, 2019.9.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개요>

- 일본은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지역인구의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을 마련해 오고 있음.
-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이 있는데, 이 법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해 **지역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함.

#### <과소(過疎, depopulation)란?>

-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 및 생산기능의 유지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지역을 과소지역이라 부르고 있음. 과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지역산업경제의 침체와 농어촌의 경우 황폐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이 도시 지역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이는 특징이 있음.

- 일본의 **과소 시정촌\***(市町村)<sup>2)</sup>은 **2018년 4월 1일 기준 817개**로 전국 1,719개 시정촌 중에서 **약 47.5%**에 해당되며, 과소 시정촌의 **인구는 약 1,087만여 명**으로 전국 인구의 **8.6%**에 **불과**하지만, **면적은 일본 국토의 59.7%**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2층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시정촌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이고, 도도부현은 시정촌을 포괄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이해할 수 있음.

#### ■ 일본의 시정촌 현황(2018.4월) ■

구분	시정촌수	인구	면적
과소지역	817개 (47.5%)	10,878,797명 (8.6%)	225,468km <sup>2</sup> (59.7%)
비과소지역	902개 (52.5%)	116,215,948명 (91.4%)	152,503km <sup>2</sup> (40.3%)
전국	1,719개 (100%)	127,094,745명 (100%)	377,971km <sup>2</sup> (100%)

주 1: 시정촌수는 2018년 4월 1일 기준이며, “과소 시정촌”의 수는 ① 과소지역 시정촌, ② 과소지역으로 간주되는 시정촌, ③ 과소지역으로 간주되는 구역이 있는 시정촌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주 2: 인구와 면적은 2015년 국세조사자료임.

## ㉔ **아젠다 발굴**

###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의 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

- 일본은 1955년 산업화가 본격화된 이래 1960년 이후부터 동경권으로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자 동경권을 제외한 지역이 낙후·과소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됨.
- 이를 위해 1970년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을 제정했고, 1980년에는 「과소지역진흥특별조치법」으로, 1990년에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으로, 2000년에는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정책을 추가해 지역활성화 시책을 추진함.
  -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은 인구의 현저한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기능 및 생활환경 정비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지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특별조치를 강구하고, 해당 지역들의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 고용 증대, 지역격차 시정 및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해당 법률(「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총 34조로 구성되며, 과소지역의 요건(제2조), 과소지역자립촉진계획(제5조~제9조), 과소지역자립촉진을 위한 재정상의 특별조치(제10조~제13조), 그리고 과소지역자립촉진을 위한 각종 특별조치(제14조~제31조)가 규정됨.
- [특별조치] 행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행정지원) 도로의 정비, 공공하수도 정비, 의료의 확보, 고령자 복지증진, 교통 확보, 교육의 내실화, 지역문화진흥, 국유임야의 활용 등이 있고, (금융지원) 농림어업공고(公庫)와 주택금융공고에서 자금대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부 등이 있으며, (세제지원) 지방세의 과세면제 등이 있음.
- [최근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일본은 2017년 3월 31일자로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공포하였으며, 과소지역 지원의 실시 상황을 감안하여 과소지역의 선정 요건을 추가하고, 지원정책을 일부 변경 및 추가함.
  - 첫째, 과소지역의 선정 요건 추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신설)함.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과소지역의 선정 시 적용되는 기간을 명시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최신 연도가 추가됨. 기존의 제1호는 1960~1995년(35년간), 제2호는 1960~2005년(45년간), 제3호는 1965~2010년(45년간)을 대상으로 과소지역을 선정했으며, 이번에 신설된 제4호에서는 1970~2015년까지 45년간을 적용 범위로 정함.

## ㉔ **아젠다 발굴**

〈과소지역의 추가 선정 요건(2017년 3월 개정)〉
<p>◆ &lt;법 제2조 제1항 제4호 신설&gt;</p> <p>다음의 ① 인구요건(가~라 중 하나에 해당) 및 ② 재정력 요건에 해당되는 시정촌은 과소지역으로 선정</p> <p>① 인구요건: 1970~2015년까지 45년간 인구감소를 기준으로서</p> <p>가) 인구감소를 32% 이상</p> <p>나) 인구감소를 27% 이상이고, 2015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6% 이상</p> <p>다) 인구감소를 27% 이상이고, 2015년 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11% 이하</p> <p>라) 1990~2015년(25년)간 인구감소를 21% 이상인 지역</p> <p>※ 단, 가), 나), 다)의 경우 1990~2015년(25년)간 인구가 10% 이상 증가한 지역은 제외</p> <p>② 재정력 요건: 2013년~2015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0.5 이하</p>

- 둘째, 과소지역의 **자립촉진**을 위한 지방채의 대상 경비에 **시정촌에 설립되어 있는 학교나 전문대학** 등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추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신설<sup>※</sup>)함.
  - ※ 제18호는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의무교육 학교 및 공립 유치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이고, 제19호는 ‘공립 전수학교 및 각종 학교’
- 셋째, **감가상각(減價償却) 특례** 및 **지방세 과세 면제** 등의 **조치 대상**이 되는 **업종**으로 **정보통신기술이용사업**은 **폐지**하고, **농림수산물 등 판매업<sup>※</sup>**을 **추가**하였음(법 제30조, 법 제31조 개정).
  - ※ 농림수산물 등 판매업이란 과소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 또는 해당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것을 매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함.

###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련 입법 현황〉

- **지역 인구감소**는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제 인구감소를 넘어 **일부 지역**의 경우 **인구소멸 위험지역<sup>※</sup>**으로 분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시군구 기준으로 인구소멸위험지역은 228개 지역 중에서 89개(39%), 읍면동 기준으로는 위험지역이 1,503개(43.4%)가 있다고 추계(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가동을 중심으로」, 고용동향브리프, 한국고용정보원, 2018).
- 현재 **개별 법률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성장촉진**이나 **지역활성화** 관련 **규정**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본과 같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음**.

## ㉔ **아젠다 발굴**

- 제20대 국회의 관련 입법 동향을 보면,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안**」이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2017.6.30.)로 제출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 ※ 여기서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아 지역의 낙후도가 심한 지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이 해당됨. 법안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계획수립과 더불어 각종 행정·재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함.
-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군(特例郡)**을 신설해,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법안이 2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 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안(2019.4.15.)은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km<sup>2</sup>)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정했고,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안(2019.7.26.)은 **농어촌 군**으로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농어촌 군 전체의 평균 미만**이며, **인구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정하도록 했음.
    - ※ 여기서 소멸위험지수는 20세부터 39세까지의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의 인구수로 나눈 값을 말함.

## 〈결론〉

- **지역인구 정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단순히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만으로 **지역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지역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재정·세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함.
- 이런 점에서 일본의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은 국내에 주는 **시사점**이 크며, 우리나라에서도 **과소지역**을 **국내 실정**에 맞춰 **선정**, **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㉔ **아젠다 발굴**

### 이슈 브리프 3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와 공공리더십**

※ 세종국가리더십포럼 1주년 기념 세미나(2019.9.18.)에서 논의된 내용을 미래정책 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는 2019.9.18일** 세종국가리더십포럼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가치와 공공리더십**에 대해 논의
  - (개최 목적)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고자 **사회적 가치와 공공리더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국정 관리 최고 책임자들이** 가져야 하는 우리 시대 **공공리더십의 규범과 이상**을 논의

#### <주요 내용: 관련 주제 발표>

- [세션 1... ‘아마티야 센의 사상과 포용국가의 사회적 가치’, 유종일 KDI 국제정책 대학원 원장] 경제학자나 철학자를 넘어서 우리 시대 최고의 사상가로 자리 잡은 **아마티야 센**을 소개
  - (센의 사상) 자유가 발전의 기본적인 목표이며 목적이라는 **센의 사상**은 **포용성장**이 추구하는 **목표** 및 **정책**과 매우 유사하고 **포용국가의 사회적 가치와 일치**
  - **아마티야 센의 이론과 사상**은 **무역분쟁**으로 시장의 자유가 위협받고,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우익 포퓰리즘**의 발호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오늘날, 차분하고 엄밀하게 현실을 평가하고 **사회발전**의 앞길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임.
  - (역량과 자유) **개인후생 평가의 전통적 척도\*** 및 **사회가치 평가\*\***의 **척도**로서 **효용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센의 역량접근법\*\*\* (capability approach)** 적용을 통해 **성장보다는 공공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 ※ 결과주의와 과정의 무시, 삶의 질에 관한 다양한 객관적 지표의 무시, 개인 간 효용의 크기 비교 불가능(선호와 효용의 한계, preference maximization and utility), 자원을 사용하여 원하는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 존재(자원과 소득의 한계, primary resource and basic income)
    - ※※ 파레토 효율성을 통한 불완전성, 분배 무시(신고전학과 후생경제학, welfare economics)
    - ※※※ ‘좋은 삶’ (good life) 영위를 위해 필요한 여러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 ㉔ **아젠다 발굴**

- (전략 제시) **소득불평등 축소 정책**을 통해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어서 **시장소득의 분배**를 공정하게 만들고 **조세와 재정지출**에 의한 **재분배**를 통하여 **불평등을 감축**
- [세션 2... ‘미세먼지 이슈를 통해서 본 공공리더십’,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미세먼지 이슈를 공공리더십** 측면에서 논의
  - (미세먼지 이슈의 복잡성) **미세먼지 이슈**와 같은 **환경문제**가 **환경부나 정부**에서 정책 수립을 통해서만은 해결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
  - (전략 제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미세먼지 이슈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다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공리더십 발휘**
    - ※ 미세먼지 합동 심포지엄 개최(2019.4.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참여
    - ※※ ▲도시환경과 개발 등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도시사회·경제 시나리오 개발, ▲인구-교통-토지이용을 기반으로 에너지와 물, 생물다양성, 토지 등의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과 수질, 폐기물 등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모델 구축
- [세션 3... ‘작은 것이 위대하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포용국가의 자치분권과 공공리더십**에 대해서 발표
  - (자치분권)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에서 **참여와 자치**가 진전되는 것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플뿌리민주주의**) **타운미팅\***은 **자유정신의 요람**이고 **플뿌리민주주의** 실천의 **기본 단위**임을 강조하고, **플뿌리민주주의**가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소득수준**의 **향상**에도 **기여**함.
    - ※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노예해방, 인권, 반핵, 환경운동의 중심지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음.
  - (전략 제시) **문제인 정부**의 ‘**읍-면-동 플뿌리자치 활성화**’ 국정과제를 통한 **세종시**의 **플뿌리민주주의 혁신\***을 제시
    - ※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자치권을 갖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읍-면-동 조례규칙 주민제안권, 주민세율 주민조정권,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참여 연령 16세 이하, ▲시민 주권대학 운영

## ㉔ **아젠다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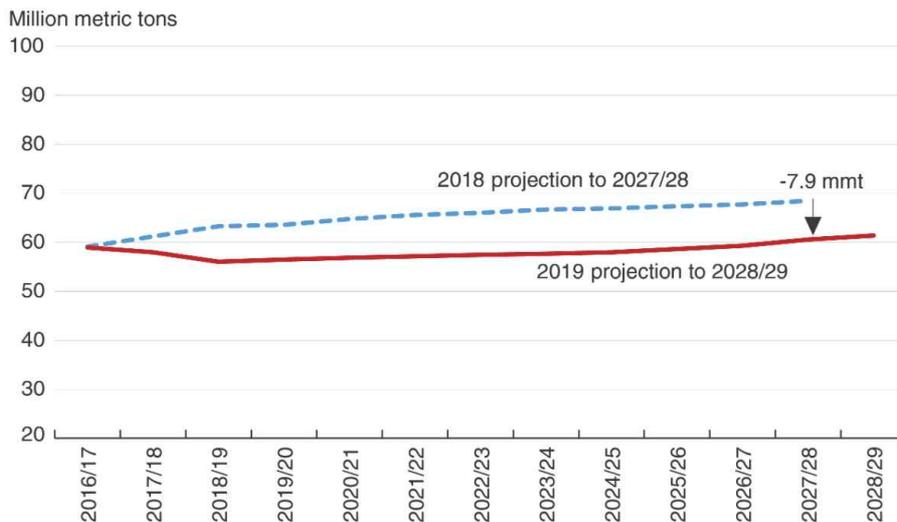
###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중장기 미국 농업전망에 미친 영향

※ 미국 USDA-Economic Research Service의 “Long-Term U.S. Agricultural Outlook Affected Broadly by Uncertainty of China’s Market” (2019.9.3.)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중장기 미국 농업전망에 미친 영향**

- **[개요]** 중국의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로 인해 2018년과 2019년 **USDA 농업전망치 차이**가 발생함.
  - 2019년 **USDA 농업전망치**는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미국 대두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서 산출함.
  - 따라서 중국의 보복관세가 존재하지 않았던 2018년 **USDA 농업전망치**는 2019년 **USDA 농업전망치**와 차이가 많음.
  - 2018년과 2019년 **USDA 농업전망치 차이**는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미국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함.

▮ 2018년과 2019년 USDA 대두 수출량 전망치 비교 ▮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 중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미국**의 **대두 수출량**은 **감소**하게 되고 **옥수수**와 **면 수출량**은 **증가**함.
-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돼지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미국**의 **돼지수출량**은 **감소**하는 반면, **쇠고기 수출량**은 **증가**하게 됨.

## ㉔ 아젠다 발굴

㉔ 2018년과 2019년 USDA 주요상품 수출량 전망치 차이

품목	단위	2018 전망치	2019 전망치	전망치 차이
대두	MMT	68.447	60.555	-7.9
수수	MMT	7.112	3.810	-3.3
옥수수	MMT	55.883	68.583	12.7
면	Million bales	15.455	17.450	2.0
밀	MMT	27.488	27.157	-0.3
쌀	MMT	3.731	3.366	-0.4
쇠고기	TMT	1,350	1,535	185
돼지고기	TMT	3,155	3,044	-111
닭	TMT	4,053	3,801	-252

주: MMT는 million metric tons, TMT는 thousand metric tons.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 중국 농업 통계의 불일치를 수정하면서 2019년 이전에 산출한 농업전망치와 2019년 농업전망치는 차이가 있음. 특히, 중국 옥수수 생산량과 재고량 통계 수정으로 국제 옥수수 시장 전망치에도 영향을 미침.
  - 2018/19년 중국 옥수수 생산량은 3천 1백만 톤, 재고량은 1억 4천 3백만 톤을 추가적으로 통계에 합산함으로써 총 1억 7천 4백만 톤의 통계 불일치\*가 발생했음.
    - ※ 통계 불일치는 2018년 10월에 개선되었으며 2019년 장기전망치부터 적용함.
-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가축 손실은 2019년 농업전망치에는 고려되지 않았음.
  - 2019년 USDA 농업전망에서 중국의 돼지 생산량은 1% 증가하고 2019-2028년 동안 12%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함.
  - 2019년 7월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생산량은 전년 대비 32% 감소하고,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50% 이상 상승하였음.
  - 생산량 감소로 인해 중국의 돼지 수입은 2백만 2천 톤으로 기존의 2019년 USDA 농업전망치보다 많아졌음.
  -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생산량 감소는 돼지 사료 감소로 이어지면서 미국 대두사료 수출에 대한 USDA 농업전망치보다 밀돌 수 있음.

## ㉔ **아젠다 발굴**

- 중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음.
  - 중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가 지속되거나 철폐될 시 미국 농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중국 농업 통계에 대한 불일치 개선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중국의 보복관세와 함께 불확실성을 더욱 크게 함.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EU, 농산물의 가격 투명성 강화 조치 도입 결정

※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Fairness in the food supply chain: commission welcomes Member States’ support for greater price transparency” (2019.9.11.)을 미래 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EU, 농산물의 가격 투명성 강화 조치 도입 결정

-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부터 공정한 농식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해 왔음.
  - 2016년에는 유통과정에서 농업인의 역할 강화\*를 위해 농산물 시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고, 같은 해 11월 세 가지 권고사항(불공정관행 금지, 생산자 조직화, 시장 투명성 강화)을 발표하였음. 2017년에는 각 권고사항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와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 ※ 2018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 시민들의 88%가 유통과정에서 농업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음.
- 2019년 9월 11일 EU 집행위원회는 가격 투명성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농산물\*의 유통단계별 가격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음. 실제 도입 시기는 2021년 1월 1일로 예상됨.
  - ※ 대상 품목은 축산물, 유제품, 와인, 곡류, 유지종자, 두류작물, 과일, 채소, 올리브유, 설탕임.
- 가격 결정 과정 확인을 위해 각 유통단계별 농산물 가격 정보 수집이 강화됨. 수집된 데이터들은 농식품 데이터포털(Agri-food data portal)과 유럽연합 시장 관측(EU market observation)에 게시될 예정임.
- 데이터 수집은 기존에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시스템과 절차를 따를 것이며, 각 회원국은 가격과 시장 데이터를 수집할 책임이 있으며, 비용과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집행위원회에 대표가격(representative price)을 보고하기로 하였음.

## ㉔ **아젠다 발굴**

- 현재도 농산물 시장에 관해 상당한 양의 정보(생산, 소비자 가격, 생산량, 교역량 등) 이용이 가능하나,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의 유통단계별 시장정보는 거의 없으며**, 이에 따른 **정보비대칭**은 **농업인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또한, **가격 투명성 강화**는 **경제주체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며, **가격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유통절차**를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촌 지역 인구와 마을 미래예측(2045년 농촌구조)

※ 일본 농림수산성 「農村地域人口と農業集落の将来予測—西暦2045年における農村構造—」(2019.8.3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㉕ **농촌 지역 인구와 마을 미래예측(2045년 농촌구조)**

-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촌의 자원 유지**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음. 그중에서 농촌 지역 인구 및 마을 미래예측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농촌 지역 인구 추이와 미래예측]** 지역 유형별로 인구감소 진행에 차이가 나타남.
  - 일찍이 인구감소 시기에 들어선 **산간 농업지역**(경지율 10% 미만, 임야율 80% 이상)은 **1970년 이후** 지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구감소가 심화될 것이며, **2015년부터 2045년까지 30년간 산간 농업지역**은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과반**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전망이다.
  - **평지 농업지역**(경지율 20% 이상, 임야율 50% 미만)에서도 인구의 **30% 이상**이 감소하고 **고령화율**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
- **[농촌 마을구조 현황과 변화]** 전국의 **평균적인 농촌 마을구조**는 **세대 수 50호**(농가 11호), **인구 174명**, **고령화율 35%**, **경지면적 17ha**임.
  - **중산간 지역**의 농촌 마을은 **규모가 작고 고령화**도 진행되어 있으며, 특히 **산간 농업지역**은 **세대 수 및 인구 감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

## ㉔ **아젠다 발굴**

- 모든 농촌 마을의 **농가 수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평지 농업지역을 제외한 농업지역의 판매농가\* 수는 한 자릿수**임. 특히 산간 농업지역의 농가 수는 마을당 4호로 크게 감소하고 있음.
  - ※ 전체 농가 중 자급 농가를 제외한 농가(경지면적 30a 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 금액 500만 원 이상)
- **[마을 변화와 활동상황]** 최근 5년간 **40% 이상**의 마을에서 **세대 수가 감소**하여 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80% 이상**의 마을에서 **인구가 감소**하였음.
  - 또한, 2015년 마을조사 결과에서 **인구규모가 작고 고령화율이 높은 마을**일수록 **마을 활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특히 인구가 **9명 이하인 마을**에서는 **활동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 농업 생산에 관한 모임, 농수로 보전 및 관리 등
- **[마을 인구 규모와 연령 구성 예측]** 코호트분석\*을 통해 **30년 후(2045년)의 마을인구**를 추계하면 아래와 같음.
  - ※ 관찰 대상자를 태어난 시기별로 구분하여 라이프스타일, 행동, 의식 등에 따른 소비 동향 분석
  - 마을 소규모화에 의해 **‘인구 9명 이하’**의 마을이 전체의 마을 중 **9%**, **산간 농업지역**에서는 **25%**를 차지할 것이며,
  - 마을 소규모화와 함께 세대원의 고령화 가속으로 **마을 인구의 과반이 65세 이상인 마을(고령화율 50% 이상)**이 **산간 농업지역**에서 **65%**, **중간 농업지역(임야율 50~80%)**에서는 **5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존속 위기 마을\* 추계]** 약 14만 곳의 마을 중 존속이 위태로운 마을이 **2015년에는 2천 곳**이었으나 **2045년에는 1만 곳**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 인구가 9명 이하이며, 고령화율이 50% 이상인 마을
  - **향후 30년간 인구가 현재의 1/3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 수가 3만 곳**(전체 마을의 23%) **이상**, 전체 마을 중 마을 인구의 **2/3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마을**이 4천 곳에서 **2만 7천 곳**으로 증가하고,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없는 마을**도 9천 곳에서 **3만 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홋카이도, 이시카와현, 와카야마현, 시마네현, 야마구치현, 도쿠시마현, 에히메현, 고치현, 오이타현**이 **2045년 존속 위기 마을 비율이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함.

## ㉔ **아젠다 발굴**

### 언론 동향

### 공익형 직불제 주요 동향

※ 아젠다 발굴을 위해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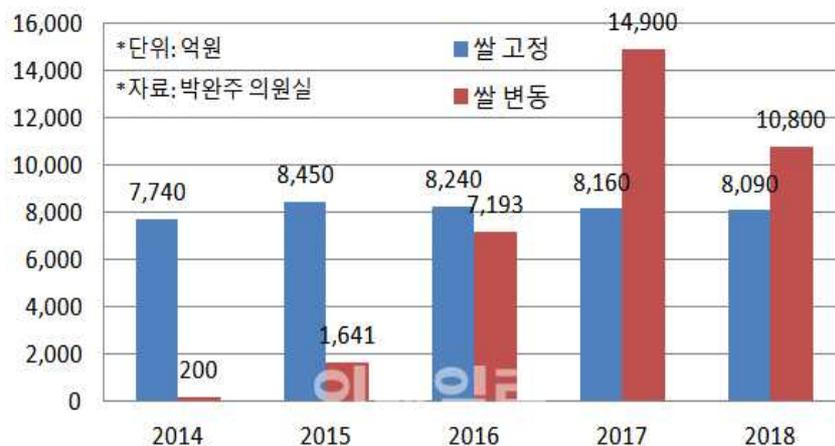
## □ **공익형 직불제 주요 동향**

- 농식품부는 2020년도 예산에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현행 직불제 개편을 위해 2조 2,000억 원을 포함했으며, 박완주 국회의원은 지난 2019.9.9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 이번 개정안은 품종은 물론 시세와 연동하지 않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농가의 쌀 쓸림 현상을 막고 다른 작물 재배 농가와의 소득 형평성도 고려한 것으로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 현재 6개로 나눈 쌀 고정, 쌀 변동, 쌀 직불,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직불금을 통합·개편한 것으로, 논·밭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만들어 직불제 예산이 쌀에 편중하는 현상을 방지하자는 것이 주 내용
- 또한, 박완주 국회의원은 지난 2019.9.9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2019.9.16일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토론회(공청회)’를 개최
  - (전문가) 2020년도 예산 편성으로 쌀 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금 제도의 개편과 함께 쌀 가격 안정화, 직불제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 (농민단체) 이 같은 개편이 쌀 농가의 소득 감소로 직결된다고 보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기
  -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 조치에 대한 투자 등 직불금의 공익적 성격을 제고하고, 단순 소득보전에서 경영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개편했다”며 “농업·농촌이 공익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 그리고 농업 자원 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직불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혀
  - 박완주 국회의원은 “현행 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후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농업직불금의 약 80%가 쌀에 편중돼 매년 쌀이 남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

## ㉔ **아젠다 발굴**

-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환경·생태 보전 등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오히려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 고 지적하는 한편, 쌀 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입(收入)감소영향완화 직불제**’를 도입한 일본 사례\*를 참고하자고 제안  
 ※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특정 품목의 가격을 보조하는 직불이 아니라 수입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가 소득안정과 쌀생산 농업인의 혜택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2020년 예산 2조 2000억 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예산 추가확보**와 함께 **목표가격제 폐지**에 따른 **쌀 생산 농업인들의 시장가격 하락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쌀 자동시장 격리제**를 도입, **농업인 기준 재정립, 직불금 불법수령 근절대책 마련**, 5년 주기 직불금 재산정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
-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전체 농가 중 **임차농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농지 취득 및 농업인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지급대상, 지급단가, 준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 하다”며 “**2019.9월 말부터**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한 안전장치 마련, 부정수급 방지** 등 세부내용과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

▣ 최근 5년간 쌀 직불금 예산 현황 ▣



## ㉔ **아젠다 발굴**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토론회’에 참석해 “2020년에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될 수 있게 관련 법령 개정과 2020년도 예산확보, 제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 “직불제 개편을 통해 ‘중소농가 경영안정’,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대’, ‘쌀·발작물 간 형평성 제고’라는 농정개혁의 가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면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고령화, 농촌 지역의 과소화 같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시장개방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강조
  - 이어 “지금의 농업 직불제는 쌀이라는 특정 품목에 집중돼 쌀의 공급과잉 및 타 작물 재배 농가와 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면적에 비례해 지급됨에 따라 정부의 농가소득보전 수단인 직불금이 소농의 소득 안정망으로써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
  - “이러한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편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쌀 중심의 농업 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부연 설명
- 또한,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과 513% 쌀 관세화 검증을 진행 중이며, 최근 국가별 쿼터 배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수입쌀 일부는 시장 수요를 감안, 밥 쌀용으로 확대 도입이 불가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밥쌀 수입이 확대되더라도 방출 시기, 물량 조절 등을 통해 우리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
- 한편, 쌀에 편중된 국내 농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가 2020년 3월을 목표로 도입을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압박이 커지는 있는 가운데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 방안이어서 시행 여부에 관심이 고조
  - 공익형 직불제는 최근 미국이 한국 등을 상대로 WTO 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하는 가운데 향후 농업 협상에서도 중요하다는 평가

## ㉔ **아젠다 발굴**

- **개도국 지위**로 인해 **농산물 변동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위를 잃으면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선회**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경우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가 **대안**으로 부상
-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관계자는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익형 직불은 감축대상보조로 분류되지 않아 제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고 언급
- 아직까지 **올해 쌀 목표가격도 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직불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농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다만, 농식품부는 “**개도국 지위와 관계없이 차기 협상 이전까지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을 그대로 유지된다**” 고 밝혔지만 **과세율 하락과 보조금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
- **홍남기 부총리는 2019년 9월 20일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WTO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며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 언급, 또한 “**아직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지에 대한)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2019년 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목표**” 라고 설명
- 이에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해 **△국익 우선, △모든 영향을 철저히 분석,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

자료: “국회, ‘공익형 직불제’ 도입 논의 시동” (한국농어민신문, 2019.9.11.), “수입산 밥쌀 시장 확대 개방 우려 커진다” (파이낸셜뉴스, 2019.9.15.), “김현수 “내년 공익형 직불제 시행 최선...농정개혁 가지 구현” ” (NEWSIS, 2019.9.16.), “쌀 편중 탈피 공익형 직불금 도입해야” (문화일보, 2019.9.16.), “WTO 개도국 포기 대응?... 공익형 직불제 도입 ‘시동’ ” (이데일리, 2019.9.16.), “국회에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 ” (내일신문, 2019.9.17.), “농업계, 공익형직불제 도입해야 ‘한목 소리’ ” (농수축산신문, 2019.9.17.), “美와 통상분쟁맨 치명상...개도국 유지 실익 없어” (서울경제, 2019.9.17.), “공익형 직불제, 농민이 생태보전의무 준수 하는지 모니터링 강화해야” / “ ‘공익형 직불제’ 직불제 6개 통합...소농에 ‘높은 단가’ ” (농민신문, 2019.9.18.), “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내달 결정... 방침은 미확정” ” (NEWSIS, 2019.9.20.), “홍남기 부총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아니다...10월 결정” ” (파이낸셜뉴스, 2019.9.20.)

## 통계·조사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자료 : 통계청(2019.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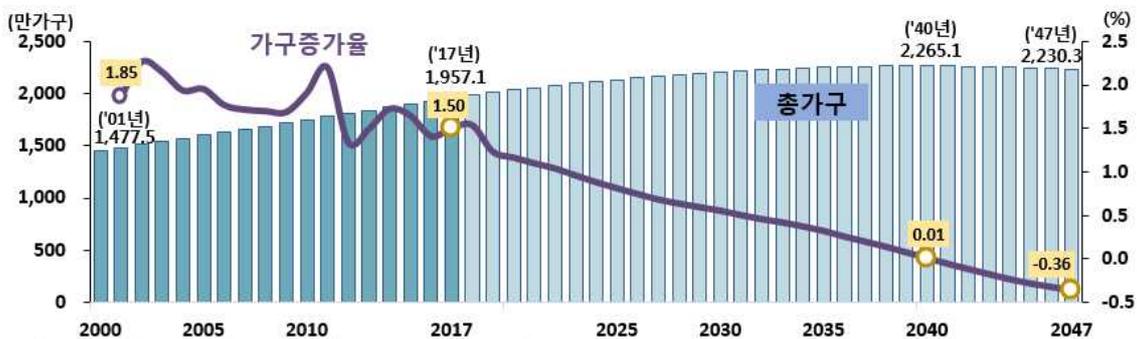
### 개요

-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발표, 2019.9.18.] 최근의 가구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장래의 가구규모, 가구유형 및 가구원수별 가구구조를 전망
  - ※ 장래가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되어 2022년 공표 예정이었으나, 장래가구추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장래인구추계 개편에 따라 최근의 인구 및 가구 추이 변동을 반영한 가구특별추계 실시함.

### 추계 결과

- [총가구] 2017년 총가구는 1,957만 1천 가구에서 2040년 2,265만 1천 가구까지 증가한 후 감소, 2047년에는 2,230만 3천 가구에 이를 전망
- [가구증가율] 2017년 총가구는 전년 대비 1.50% 증가하나, 가구증가율은 점차 감소하여 2041년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 2047년에는 -0.36% 수준으로 예상
- [평균 가구원수] 2017년 평균 가구원수는 2.48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47년 2.03명까지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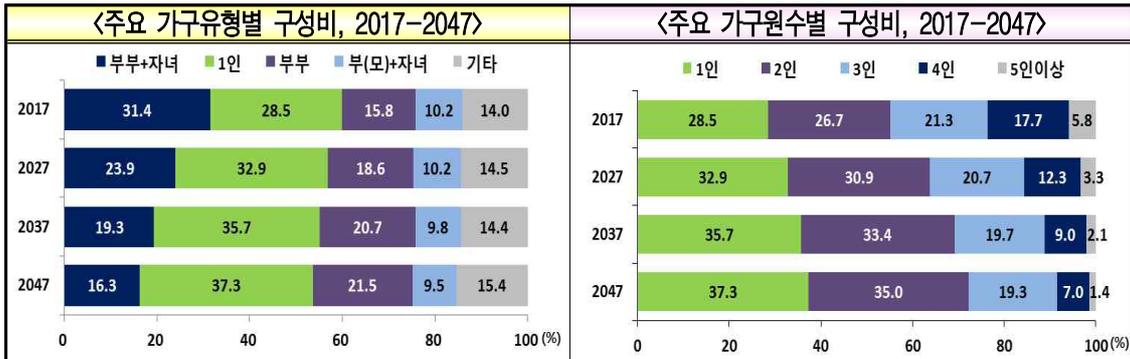
총가구 및 가구증가율, 2000-2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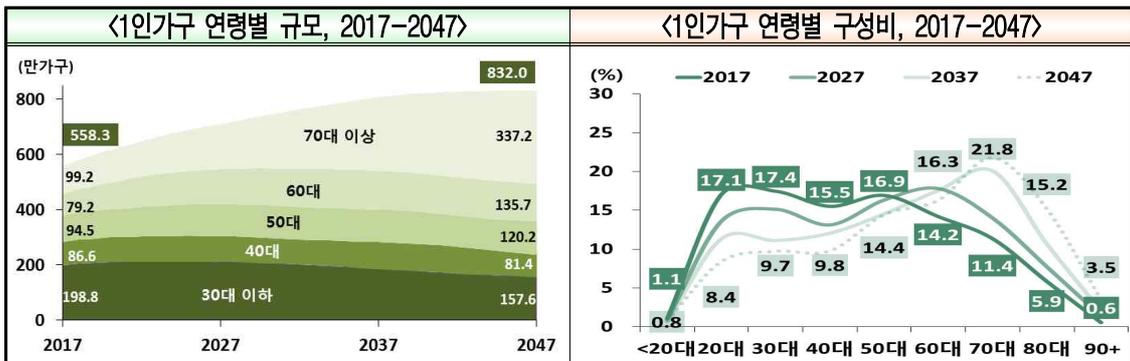
- [가구유형] 2017년 가구유형은 부부+자녀가구(31.4%) > 1인가구(28.5%) > 부부가구(15.8%) 등의 순으로 많았으나, 2047년에는 1인가구(37.3%) > 부부가구(21.5%) > 부부+자녀가구(16.3%) 순으로 변화할 전망

㉔ 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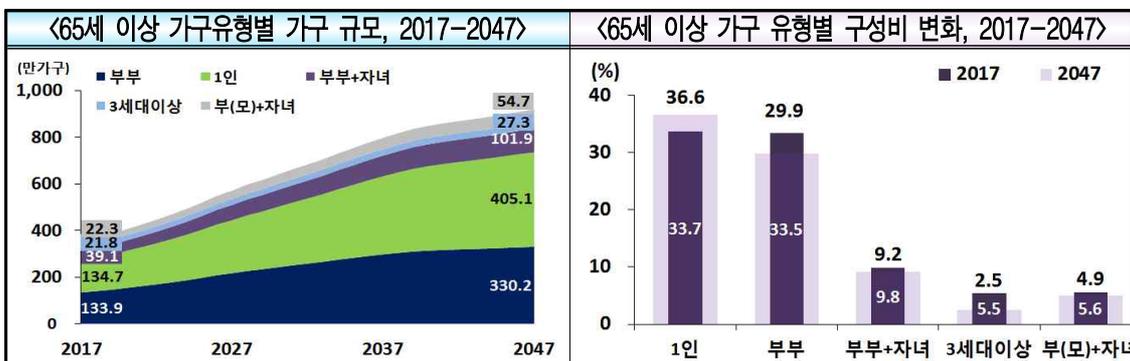
- [가구원수] 2017년 가구원수별 가구 비중은 1인가구(28.5%) > 2인가구(26.7%) > 3인가구(21.3%) > 4인가구(17.7%) 순이었으나, 2047년에는 1인가구(37.3%), 2인가구(35.0%)는 증가하는 반면, 4인가구(7.0%)는 감소할 전망



- [가구비중] 2017년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28.5%(558만 3천 가구)에서 2047년 37.3%(832만 가구)로 8.8%p(273만 7천 가구) 증가할 전망
- [가구주 연령] 2017년 1인가구 중 30대 이하의 비중이 35.6%(198만 8천 가구)로 가장 높으나, 2047년에는 70대 이상이 40.5%(337만 2천 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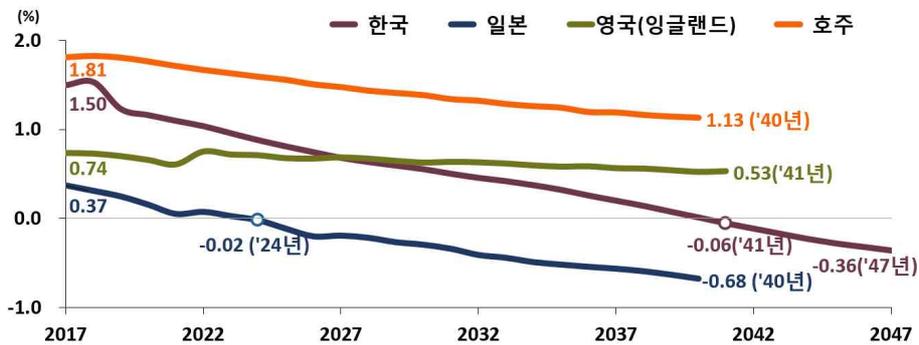
- [고령자 가구]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17년 399만 8천 가구(20.4%)에서 2047년 1,105만 8천 가구(49.6%)로 2.8배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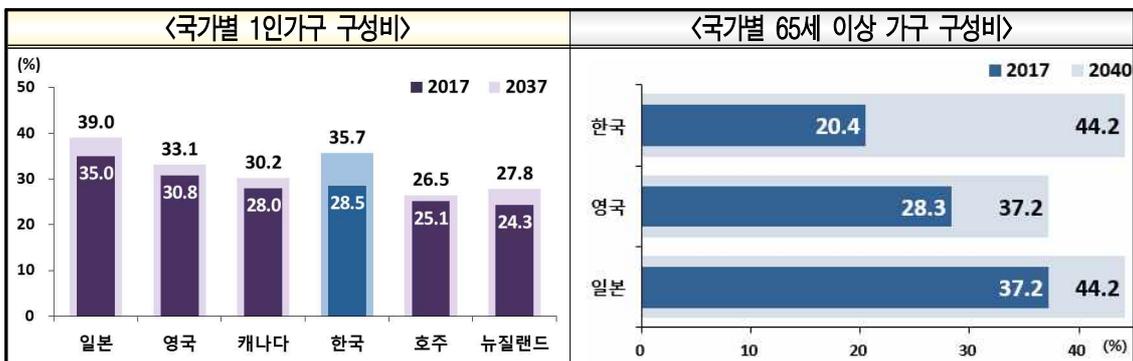
## ㉔ 통계·조사

- [여자 가구주] 2017년 여자 가구주는 594만 4천 가구(30.4%)이었으나, 2047년에는 875만 1천 가구(39.2%)로 2017년의 1.5배 증가
- [가구주 연령] 2017년 40~50대 가구주가 전체의 46.7%로 가장 많았으나, 2047년에 60~70대가 41.2%로 가장 많아질 전망
- [국제비교] 2037년 한국의 1인가구 비중, 일본보다 낮고 영국·호주·캐나다보다 높아
  - (가구증가율) 일본·영국·호주 모두 가구증가율은 둔화 추세, 일본은 2024년부터, 한국은 204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

【 국가별 가구 증가율, 2017-2047 】



- (1인가구) 2037년 한국의 1인가구 구성비는 35.7%로 일본(39.0%, 2037년)보다는 낮고, 영국(33.1%, 2041년), 캐나다(30.2%, 2036년), 뉴질랜드(27.8%, 2038년), 호주(26.5%, 2037년)보다는 높은 수준
- (65세 이상 가구) 2040년 한국의 65세 이상 가구 구성비는 44.2%로 일본(44.2%, 2040년)과 유사하고, 영국(37.2%, 2041년)보다는 높아



※ 자료출처: 한국: 통계청 2019 장래가구추계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18 장래가구추계 / 영국: 통계청 2018 장래가구추계(그림은 2016년과 2041년 잉글랜드 자료) / 캐나다: 주택담보공사 2018 장래가구추계(그림은 2016년과 2036년 자료) / 호주: 통계청 2019 장래가구추계 / 뉴질랜드: 통계청 2017 가구추계(그림은 2018년과 2038년 자료)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